

OECD EPC 회의 결과

◇ '15.10.29~30일, 파리에서 OECD 경제정책위원회(EPC: Economic Policy Committee)가 개최된 바, 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* 우리측 참석 : 민생경제정책관(수석대표), 한국은행 조사국 장정석 팀장, KDI 거시경제연구부 정대희 연구위원 등

1. The slowdown in potential growth and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(잠재성장률 둔화와 성장 구조개혁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(현황) 최근 구조개혁 속도가 '13-'14년 비교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며 국가·정책별 개혁 진행정도가 차별화되는 모습
 - '15년 구조개혁보고서 정책권고의 일부만 시행·완료된 상태
 - * (선진국) 완료 7%, 진행중 29% (개도국) 완료 2%, 진행중 42%
 - (국가별) 서유럽(이태리, 스페인)이 북유럽 국가보다 구조개혁 진행속도가 빠르며, 일본, 인도, 멕시코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
 - (정책별) OECD 국가들은 주로 여성 고용참여 촉진, 교육 성과 향상 등을 활발히 추진했으나, 혁신,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, 노동규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

<'15년 구조개혁보고서(going for growth) 주요내용>

- 신흥국의 경우 성장제약요인 등 취약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였으나, 선진국의 경우 구조개혁이 둔화되는 모습임을 지적하며 다음의 구조개혁 추진을 권고
- ①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·지식기반자본(Skills and Knowledge-based Capital)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
- ②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 진입 및 노동과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배분될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할 필요
- ③ 여성, 저숙련자,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, 일자리 매칭 기능,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

- (한국 현황 및 평가) 서비스 부분의 저생산성, 급속한 고령화, 여성 노동참여의 어려움 등이 지속
 - OECD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, 현재 이와 같은 개혁 진행이 미흡하다고 평가

<한국 주요권고사항>

- ①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
 -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무역 장벽 완화, 신규 기업, 소매·전문 서비스업 규제 완화,
- ② 농업에 대한 공공 지원 축소
- ③ 고용보호 개혁 및 과도한 정규직 보호 개선
 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비정규직 보호 확대
- ④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
 - 환경세,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
- 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및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정책
 - 출산 휴가 사용 확대,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, 직업 연계 교육 확대

- (구조개혁의 영향)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소득 분배, 경상수지 등에 긍정·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
 - (소득분배) 일부 개혁들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 시키고, 경쟁·혁신을 촉진시켜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
 - (정부재정) 민간고용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에 기여하나,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 확대·수입 축소 등 부정적 영향
 - (경상수지) 소비,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개혁 정책은,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의 적자폭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전 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어가는 가운데, **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**, 개혁의 성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**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**(의장)
 - 각국 통화·재정정책 여력이 과거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**구조개혁의 중요성이 증가**(뉴질랜드)
 - 구조개혁의 **단기적 영향** 뿐 아니라 **중·장기적 영향도 중요**하며,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나 중·장기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(EU, 일본, 네델란드)
- **각국 대표는 최근 성장 둔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**을 강조
 - 서비스부문 생산성 저하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, 특히 **중앙-지역간 격차 해소**를 위해 노력중(덴마크)
 - 투자 감소로 생산성이 둔화되었으며,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**노동시장 유연성 제고** 등 구조개혁을 진행중(이탈리아, 스페인)
 -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, 최근 성장 지속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**경제혁신 계획**을 수립(멕시코)
- 구조개혁의 성과 측정시 유의할 점, 효과적인 개혁 수단, 잠재성장률 변화 등에 대한 **추가적 연구가 필요**
 - **총요소생산성** 감소 등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 인지 여부, 국가별·시기별 차이에 대한 **분석이 선행될 필요**(EU)
 - 개혁시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으나, **중·장기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**(네델란드)
 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**개혁 수단, 잠재성장률 변화**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(이탈리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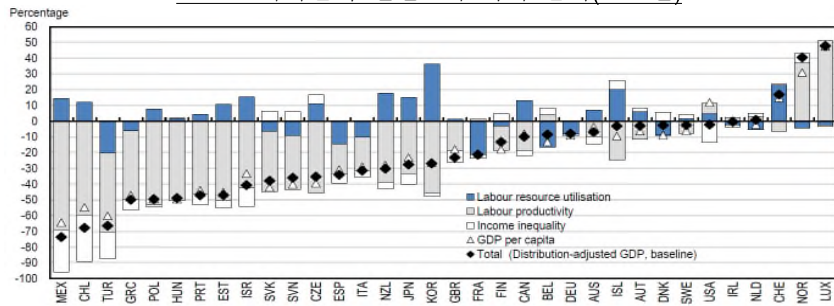
2. Income growth and inequality (소득증가와 불평등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(논의 배경) 다음의 이유로 **1인당 GDP와 생활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 증가**
 - ① **가처분 소득**은 지난 30년간 일정하게 증가한 편이나, **시장 소득 불평등성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**
 - ② **높은 가계 가처분소득이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지 않음**
⇒ GDP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분배 추정에서 **소득규모와 분배를 통한 생활수준 추정으로의 전환 필요**
- (기존논의의 한계) Going for Growth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슈는 제기되고 있으나, **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생활수준과 관련된 논의 부족**
 - 최근 평균소득보다 **삶의 질에 중점**을 두는 논의 **"beyond GDP"**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나,
 - 건강과 같은 **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에 대해 포괄하지 못함**
⇒ 따라서, **非소득 분야의 측정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**
- **생산과 소득분배의 통합적 분석**
 - (가계 관점에서의 성장회계) 가계관점으로부터의 **실질 소득 증가에 대해 평가 후 실질소득의 분배적 민감도 지표 도출**
 - **불평등 반영 실질소득**은 **노동생산성과 활용도(labor utilization)**로 구성

- ① 실질소득의 국가간 차이는 주로 노동생산성 차이에 기인
- ② 절반 이상의 OECD국가들에서는 실질 소득의 차이에 노동 활용도가 미치는 영향이 소득 불평등보다 큼
- ③ 저소득 국가의 경우 불평등 반영 GDP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,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남
- ④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불평등 반영 GDP로 비교 시 미국의 경우 낮은 수준, 북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바뀜
- ⑤ OECD 국가들에 있어 노동생산성, 노동활용도, 소득 불평등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

OECD 국가들의 실질소득 차이 분석(2014년)



* 상위 50% 국가 대비 불평등 조정 실질 소득 비율

-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한 두가지 제안
 - 1인당 GDP 증가가 아닌, 소득불평등을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설정을 위해선,
 - 1인당 GDP의 성장이 가계소득 증대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성장 과실(growth dividends)의 분배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함

⇒ 이러한 인식하에 다음의 두가지 안을 제시

- (제안1) 분배가 반영된 GDP의 최대화 여부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완벽히 통합하는 방법
- (제안2) 성장과 관련된 우선순위와 평등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접근하는 방법
 -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게 성장, 평등 등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소득불평등, 웰빙 등 다양한 지표를 성장(going for growth)에 반영하자는 논의는 시의적절하고, 각국에 정책적 합의를 줌
- 다만 OECD측의 <제안1>은 지니계수의 한계, 불평등을 반영하는 방식(formular) 합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주요 국가들은 <제안2> 혹은 <제3의 대안>을 지지
 - 성장,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국가에 <제안1>은 적절하나, 그렇지 않은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(제안2, 프랑스)
 - <제안1>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이거나, 국가별로 다른 사회여건을 미반영하는 한계(제안2, 벨기에)
 -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나, <제안1>은 너무 많은 가정에 의존하며, 건강 등 다른 지표도 고려 될 필요(제안2, 노르웨이)
 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는 중요하며, 분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(indicator)를 개발해야함(제안3, 일본)
 - 웰빙을 고려한 정책을 선택해야 하며, 구조개혁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며 정책간 우선순위를 정해야함(제안3, 덴마크, 이스라엘)

- 한국은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자는 논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며, 한국도 성장·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나, 다음의 이유로 <제안2>를 선호
 - ①정책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하나의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②저소득 국가에서 불평등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악화될 우려 ③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지수를 산출하기 어려움 ④분배가 반영된 GDP를 도출하는 방법이 다소 자의적임

3-1. Regional rounds(China)

(경제전망: 중국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중국경제의 향방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부각
 - 금년 중 중국 주가급락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및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
 - 아울러, 내수(소비)기반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, 부동산업 및 중공업의 불균형해소,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문제해결 등 중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
 - 데이터를 통해 관측된 무역경로 및 금융경로는 중국경제 둔화의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할 우려
 - 중국의 경기부진 및 수요감소는 중국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

* 미국에 모회사를 둔 중국 현지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기준 \$3,640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·중 교역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

* 중국 내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도 대중국 수출액의 두 배 수준

- 중국과의 직접적인 금융경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,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음

* BIS 통계에 의하면 해외 은행들의 중국에 대한 역외 자산은 \$7,600억을 기록하며 전체 역외 자산의 3.1%에 머물고 있으나, 중국의 위안화 절하 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주식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

- 중국의 성장 둔화에 비해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더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
 - 중국 내수 성장률 2%p 하락시, 향후 2년간 OECD의 연간 성장률은 0.1~0.2%p, 세계경제성장률은 0.3%p 하락 추정
 - 하지만,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0.75~1.0%p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중국경제 둔화와 함께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충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
- 중국은 환율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 있으나, 이는 주요 신흥국들의 평가절하를 야기하여 중국 경제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
 - 평가절하는 총수요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, 최근 사례 감안시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수요는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게 될 것
 - 아울러,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수출의존을 심화시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음

< 중국대표 논의 내용 >

- 구조변화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,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은 아직 견조하며 앞으로도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
 - 거시경제지표들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, 투자에서 소비중심 경제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
 - 해외 여행객 급증 및 음식점업 활황 등 소비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항저우 등 일부 도시는 신규기업이 빠르게 증가
 - 한편, 부실기업 부채 및 지방재정 문제 등은 이미 정부가 심각히 받아들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
 - 아울러, 두 아이 출산 허용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, 예금이자율 자유화 등 금융규제 완화에도 진척이 있음
 - 마지막으로, 경상수지 흑자,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능력 향상 등 외환시장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함을 강조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원인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,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
 - 구체적으로, 중국 성장률 둔화가 SOC 투자의 조정 혹은 위안화 절상 등에 기인한 것인지 질의가 있었음
 - 중국 대표는 노후된 상하수도, 신규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SOC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, 환율 보다는 해외 수요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

- 한편, 최근 중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본 유출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, 중국대표는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실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, 이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밝힘
- 투자조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의가 있었으며, 중국대표는 거시경제 부양에 힘쓰고 있으며, 은행 부실채권 상각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
- 중국대표는 신규 성장산업 지원, 외환시장 및 금리 자유화 추진 및 SOC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은 성장률 저하를 완충할 것임을 밝힘

3-2. Regional rounds(Emerging Market Economies)

(경제전망: 신흥국의 전망과 정책 이슈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대내외 여건에 달려있으며, 국내의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음
 - 신흥국의 경기회복은 중국의 완만한 경기둔화, 원자재 가격 및 통화가치의 안정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인 경우에 가능하며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은 불확실
 - 브라질, 칠레, 멕시코 및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들은 원유가격 등 원자재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경우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또한, 신흥국들은 미국의 통화정책정상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
 - 미국 금리인상시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 - 다만, 과거 미국 금리인상시의 경험을 고려해보았을 때 모든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

□ 신흥국들의 기초경제여건은 과거보다 우수한 편이지만, 자금 유출 및 금융시장불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

○ 브라질, 러시아, 터키 등 몇몇 대형 신흥국들은 과거에 비해 GDP 대비 외화채권비율이 낮으며, 직접투자비중이 상승하는 등 부채구조 또한 개선되었음

○ 최근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절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비용을 상승시켰으나,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

○ 하지만, 칠레,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은 높은 외화채권비율, 낮은 직접투자비중, 대형자금유입 등으로 자본유출에 취약한 구조

□ 아울러, 많은 신흥국들에서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

○ 브라질, 중국 등에서 비금융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향후 경기둔화 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, 상반된 의견의 교환이 있었음

○ 칠레대표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 많은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위기상황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

○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일부 신흥국은 교역조건 개선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점을 공지

○ 하지만, 신흥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시, 위기 가능성 논의는 시의적절(EDRC의장)하며 지역적인 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(사무국장)한다는 의견도 있었음

3-3. Regional rounds(United States)

(경제전망: 미국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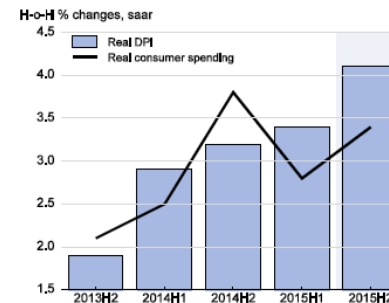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□ 미국은 견조한 가계소비 증가세를 바탕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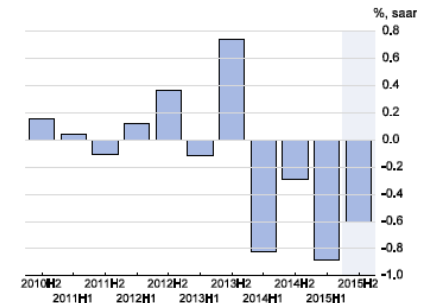
○ 가계소비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 및 이에 따른 가계자산 증대,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에 의해 증가

○ 다만 달러화강세 지속 및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것이 성장의 가속화를 제약

실질가처분소득 및 가계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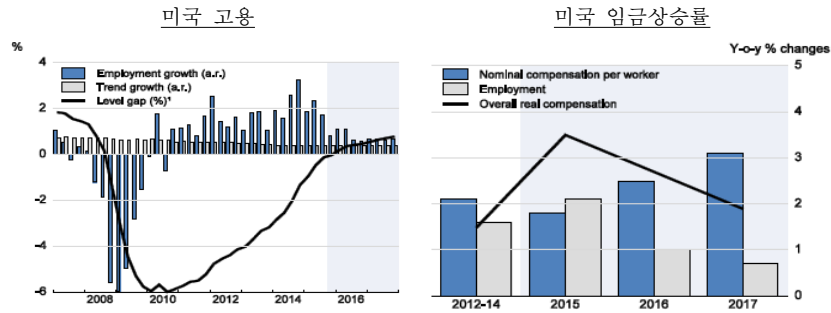


미국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



□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구조적 실업률을 하회하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높은 실업률,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

○ 임금상승률 또한 상승세가 뚜렷하지 못한 모습



□ 통화정책의 경우 2017년까지는 완화된 기조를 유지할 전망

- 달러화강세, 유가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인 2%를 하회하는 수준
-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라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
-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 시점이 지연될 경우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함

□ 미국의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부채한도 증액 시한(11/3)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퀘스터 이슈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

- 재정적자 폭은 2017년 이후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보장지출, 의료지출 확대에 기인
- 현재 재정적자 수준이 역사적 수준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외부충격이 올 경우 지난 2013년과 같은 섀도우 리스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층 소득세율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
□ 2015년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

- 에너지가격 하락, 달러 강세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상승하겠지만 수출 감소가 성장 가속화를 제약할 전망
- 수출의 경우 달러 강세 현상이 사라지고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2017년경 하락세를 그칠 전망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아국 대표단을 필두로 최근 저유가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*에 대해 질의(한국, 독일)

* 일반적으로 저유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의 저유가 상황이 미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

-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투자측면에서 셰일오일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, 소비측면에서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

- 양적으로는 국제유가가 10불정도 하락하면 성장률을 0.3%p 정도 높인다고 부연설명

□ 미국의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네덜란드, 이탈리아, 일본 대표단이 slack관련 추가 정보 확인 요청 및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의 원인 등에 대해 질의

- 이에 대해 미국은 고용시장의 slack을 평가하기 위해서 LMCI(Labor Market Condition Index)*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

* 개별 노동지표들의 공통정보를 추출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노동상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

- 또한 노동시장 참여율(participation ratio)*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고령화에 기인한다고 답변

* 노동가능인구 대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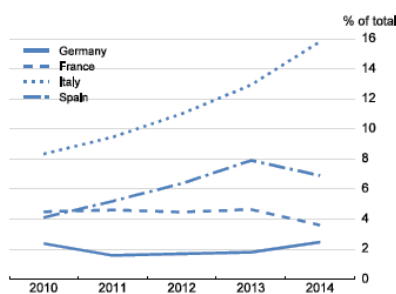
3-4. Regional rounds(Euro Area)

(경제전망: 유로의 전망과 정책 이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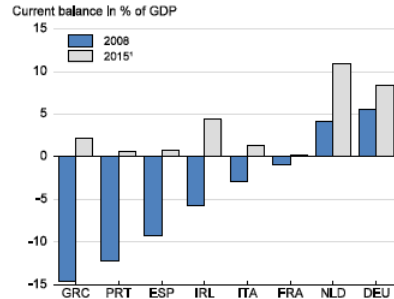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유로지역은 내수와 역내수출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
 - 다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실업률은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
- 역내 국가간 경기상황의 비대칭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일부 취약국가의 높은 실업률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
 - 신흥국 경기 부진 등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양적완화에 기인한 유로화 약세 현상이 역외수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
 - 잠재성장률 확충,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우선과제로 대두

주요국 부실대출 규모 추이



주요국 재정수지



- ECB의 양적완화 정책은 민간부문으로의 신용 공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정상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

-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체계 마련 등을 통한 금융기관 구조 조정이 시급한 상황

- 또한 실물부문의 투자 확대가 견조한 회복세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EU 차원의 친환경 정책 노력이 투자회복세를 견인할 가능성

- 향후 유로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, 저유가 지속 등에 기인하여 2%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- 하방리스크로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부진,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이 존재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일본은행의 QE가 그 성과가 부진한 데 반해 ECB의 QE의 경우 성장기여도*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질의*

* 금년도 GDP성장률 1.5%중에서 0.8%p가 통화정책 여건으로부터 기인

- ECB는 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성장기여도 시산시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의 효과도 같이 반영하여 모형으로부터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

- 한편 독일 대표단은 유로지역의 난민문제에 대해 질의

- ECB는 이에 대해 자원 배분의 문제라는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평가에 한정하여 답변하였으며 실제 전망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언급

- 난민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GDP 증대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것임

3-4. Regional rounds(Japan)

(경제전망: 일본의 전망과 정책 이슈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2015년 중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저유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낮음
 - 당초 시뮬레이션 결과, 저유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은 '15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%p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것은 대외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
 -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비금융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제한적
 - 최근 가계의 GDP대비 순금융자산은 증가하였으나, 가계의 GDP대비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
 - GDP대비 기업 부채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축적이 더 컸기 때문에 GDP대비 순금융자산은 증가
 - 지속적인 불확실성 또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,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< 일본 대표부 발표내용 >

- 최근까지 부진했던 경기의 완만한 회복, 인플레이션 상승,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 등을 전망하고 있으며,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간략히 소개
 - 9월 산업생산이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, 다음 달 전망치도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냄.
 - 유가하락 등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,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
 -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구인구직비율은 상승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개선추세는 지속
 - 아울러 1단계 아베노믹스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, 지출측면 구조조정을 위해 1) industrialization in public related service, 2) incentive reform, 3) innovation in public services의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힘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산업생산 및 성장률 전망과 관련하여 향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질의
 - 단기적으로 좋은 지표가 나왔으나, 경기회복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데, 어떠한 근거로 전망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
 - 일본대표는 실적치가 증가한 가운데 다음달 속도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을 전망하였다고 설명
- 일본 중앙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가 있었음

- 일본대표는 내년도에 현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(0.5%)를 상회하는 1.0%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**인플레이션 압력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**
- 아울러, 2분기 소비감소 및 최근 투자부진의 원인과, 양적완화규모의 상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
- 일본대표는 나쁜 기상여건 및 자동차세 인상(소형차) 등으로 2분기 소비가 부진했고, 설비 노후화 및 고용절약 목적의 투자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, 양적완화 규모에 있어 **한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**

4. Policy packages to address climate change

(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패키지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-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비용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며, 온실가스농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**제로 순탄소 배출경제(zero net carbon emission economy)**가 요구됨
- 시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 위험들이 고려되고 있지만, 더 **강한 공공의 조치가 필요**
- OECD 및 신흥국가들이 실행하고 있는 **기존의 조치들은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탄소배출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도**
 - 결단력 있고 공조된 강한 정책적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저탄소배출 관련 투자와 연구·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현재의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

- 대부분의 정책적 대응들은 예산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개혁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음
 - 빈곤국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, 몇몇 정책들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재정, 불평등 및 성장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관련 정책대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임
 - 인도네시아, 스웨덴 등에서 균형재정, 불평등, 투자 및 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성공적 사례들이 존재
- 한편, 정책입안자들은 과도한 비용을 야기하는 정책 및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은 조정해 나갈 필요
 -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의 저탄소 정책 등은 과도한 비용을 야기하므로 향후 정책설계에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,
 - 특정 산업, 에너지원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 보다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각국 대표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제언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언급하면서,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
 -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의 거시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,
 - 윈윈정책이라는 주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성공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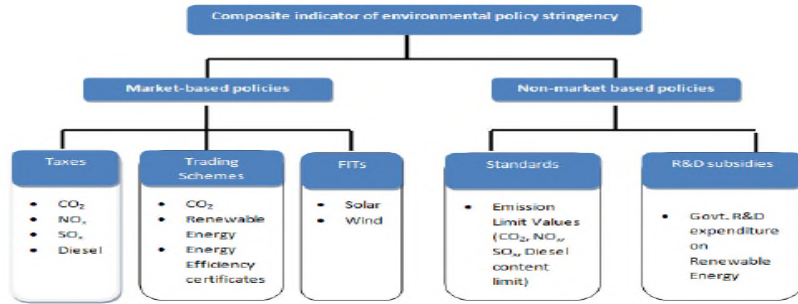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, 기후변화라는 위협을 특정의 금융상품을 통해 관리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,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금융안정성 확보 정책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지 질의
- 민간 투자가 왜 잘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정책은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
- 사무국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며, 탄소배출 비용의 합리화를 위해 과세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함
- 사무국장장은 국가별로 탄소배출에 대한 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국가의 세율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, 보다 강력한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긴 시간을 할애하며 설명
- 아울러, 고 탄소배출 에너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
- 더불어, 독일의 경우 정치적 결정에 의해 탄소배출관련 과세정책이 결정되었다고 지적
 - 독일 대표는 과세를 통한 조정과 더불어 보조금 정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, 세율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
-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

5. Environmental Policies and Trade: Do Environmental Policies Affect Global Value Chains? (환경정책과 무역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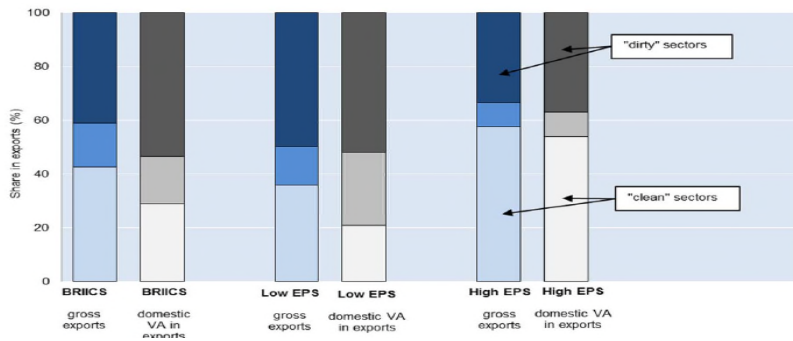
-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자국 상황에 맞는 환경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별로 환경정책의 강도(stringency) 차이가 나타남
 -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오염부담금으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나타남
 - 국가별 생산분업화가 진행되어 생산단계별로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경오염부담금으로 인한 특정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는 글로벌 가치 사슬(global value chain)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
- ⇒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국별 환경정책 차이로 기업들이 환경정책 강도가 약한 국가(Pollution Haven)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동 행태가 국제무역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
- 먼저 국가별 환경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OECD가 개발(Botta and Kozluk, 2014)한 EPS (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) 지수*에 BRIICS 국가와 포함 항목을 확대하여 수정된 EPS 지수를 산출
 - * 24개 OECD 국가에 대해 15개 기준 환경정책을 평가하여 0부터 6까지 지수로 환경정책의 강도(숫자가 클수록 강도가 강함)를 산출

EPS 지수의 구조



- 수정된 EPS 지수로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EPS 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생산을 더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나 **환경오염부담금이 기업의 생산비용에 유의미한 영향**을 주는 것으로 파악

EPS 지수로 비교한 국가별 수출 비중



- 국가별 환경정책의 강도 차이가 국제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0-2009년 동안의 23개 OECD 국가와 6개 BRIICS 국가의 패널자료를 **gravity model**에 EPS 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도 이를 반증
-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환경정책의 강도가 센 국가들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수출이 **유의미하게 낮은 수준**인 것으로 나타남

- 평균적으로 더 강도 높은 **환경정책을 시행**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**오염물질 배출 산업 수출 비중이 4% 정도 낮은** 것으로 나타남

- 다만 환경정책의 강도 차이가 특정 국가의 총수출/수입에 대한 **경쟁력 차이를 유발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는** 것으로 나타남

- 이는 환경정책의 강도가 강한 나라일 경우 상대적으로 친환경 산업의 발전 속도 및 정책적 노력이 합쳐져 동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나타나 **오염물질 배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상쇄**하였기 때문으로 판단

< 주요 논의 내용 >

-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**탄소배출권 가격**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환경관련 규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지적
- 일반적인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**규제를 회피하는 산업**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가 당초 PHH (Pollution Heaven Hypothesis)*와 괴리가 발생한 한 원인일 수 있음
 - * 오염산업은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 주로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
- OECD 사무총장은 본 연구가 기존과 달리 OECD에서 편제한 TiVA (Trade in Value Added) 통계를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**환경규제 필요성을 강조**
- 일본대표단은 **생산단계별로 분리하여 연구를 발전**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제시
- 한편 독일대표단은 **환경규제와 투자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**할 경우에 좋은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코멘트